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동영의 ‘반성문’

2010.9.14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목 차

1. 정동영의 ‘반성문’
2. 신자유주의 주요 특징과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
3. 신자유주의의 세 가지 발전 방향
4.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5. 경제위기의 교훈과 과제



<http://saesayon.org>

요약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정동영의 ‘반성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가 모든 것을 잃게 한 것만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기업과 금융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과거 합의와 협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지배력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국가를 자유와 효율성의 장애물로 간주하여 자유시장 또는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도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영원리에 따라 국내적 수준에서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기업과 금융의 탈규제
- 2) 정부 서비스의 사유화와 사회지출 축소
- 3)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 4) 대자본과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공격
- 5) 장기/정규 고용에서 단기/비정규 고용으로 노동과정 전환
- 6) 단기이윤 추구를 비롯한 기업 운영의 시장원리 확대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핵심 구호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금융, 미디어, 의료, 서비스업 등 각종 ‘선진화’의 지향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그들이 그토록 닳고 싶어 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다름 아니다.

본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과 경제위기의 관계, 그리고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던져 주는 교훈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문

1. 정동영의 ‘반성문’

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2007년 대선이 끝나고 불과 9개월 만에 터져 나온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 였다는 사실을...

위의 글은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내놓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이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를 들고 정권을 손쉽게 교체하였다. 90년대 초반 세계화, 국가경쟁력, 그리고 금융자유화의 깃발을 들고 우리사회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외환위기를 몰고 왔던, 바로 그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렇게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으며, 세계경제의 심장부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2년이 지났다. 극심한 경기침체, 실업률 상승, 고용시장 악화 등 경제적 삶의 질의 추락뿐 아니라, 출산율 저하,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의 ‘반성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가 모든 것을 잃게 한 것만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현 정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2년 동안 어떤 반성과 성찰을 했을까? 친서민, 공정한 사회라는 요란한 구호처럼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현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제정책들을 비교해 보자.

2.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란 기업과 금융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과거 합의와 협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지배력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국가를 자유와 효율성의 장애물로 간주하여 자유시장 또는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도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영원리에 따라 국내적 수준에서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기업과 금융의 탈규제
- 2) 정부 서비스의 사유화와 사회지출 축소
- 3)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 4) 대자본과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공격
- 5) 장기/정규 고용에서 단기/비정규 고용으로 노동과정 전환
- 6) 단기이윤 추구를 비롯한 기업 운영의 시장원리 확대

지난 2년 반 동안 ‘친기업’을 모토로 내걸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 위외 신자유주의 특징에 견주어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1) 기업과 금융의 탈규제 정책: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융선진화, 미디어법 도입, SSM(기업형 슈퍼마켓),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 2) 정부 서비스의 사유화: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의료 민영화
- 3)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인하
- 4) 노동조합 공격: 노사관계 선진화·법치화, 타임오프 제도, 공공기관 선진화
- 5)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 비정규직보호법 유예, 고용유연성 제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핵심 구호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금융, 미디어, 의료, 서비스업 등 각종 ‘선진화’의 지향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그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주국의 심장부가

맥없이 무너져 내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외치며 다른 사회로 전환하고 있을 때,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엔진을 더 세게 돌리고 있다. 다만 정치적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만을 재생산하고 있다.

3. 신자유주의의 세 가지 발전 방향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발전 경로를 보이고 있다. 첫째, 생산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구 간 소득의 불평등 확대다. 둘째, 금융 부문이 점점 더 투기적이고 위험한 경제활동에 집중한다. 셋째, 자산시장의 주기적인 버블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신자유주의 특징들은 양극화 또는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 국내적 수준에서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며, 국제적 수준에서 자유무역 확대는 산업 간 양극화 확대를 초래한다.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는 민간부문의 저임금 고용으로 전환을 초래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는 ‘사회적 임금’ 하락을 통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저하시킨다. 법인세와 부유층 소득세 인하, 중부세 폐지 등이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두말한 나위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 전환은 저임금 고용의 확대를 통해 실질임금의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소수 정규직과 다수 비정규직의 분할,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하락시킨다. 마지막으로 주주자본주의를 통한 CEO의 천문학적인 보수와 자사주 매입 등은 자산 양극화의 확대를 가져온다.

금융선진화, 금융허브로 요약되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고위험 투기 활동을 초래한다는 것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옵션 시장과 외환시장 변동성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NDF(역외선물환) 거래량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키코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ELF, ELS ELW 등 각종 장외파생상품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기 방지를 위한 거래세나 은행세 부과에는 관심조차 없다. 중앙은행의 감독 및 조사권 강화를 통한 금융안정 추구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은행법 개편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의 두 가지 방향이 집약된 결과로서 자산시장의 버블이다. 기업 이익의 증가, 가계소득 양극화는 각종 투자펀드로 자금이 집중되고 이는 자산시

장 버블의 토대를 제공한다. 과거 근로자 저축 제도 등 세제 지원을 통한 예금 장려 정책을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비대칭적 거래세 제도나 각종 세액 공제를 통해 투자펀드를 육성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일단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시작되면, 금융시장은 이 버블을 키우기 위해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단기이익추구는 유력한 금융환경을 제공한다. 2000년 이후 코스닥 버블, 신용카드 버블, 그리고 부동산버블 등은 모두 이러한 내적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였다. 무엇보다 미국보다 심각한 가계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DTI 한도 해제를 통해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는 경제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버블은 커질수록 터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평범한 상식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4.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양극화, 금융 투기, 자산 버블, 이 세 가지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매우 취약한 경제운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성장 동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둘째 자산버블 붕괴는 총수요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버블을 생성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

위의 두 가지 정책함의에서 핵심은 자산시장 버블이다.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양극화와 금융투기는 총수요의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상위계층으로 소득 집중, 노동자의 실질임금 정체, 그리고 정부의 사회지출 축소는 국내 소비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또한 금융과 투기적 자산시장의 막대한 이득과 규제완화는 국내 생산적 투자의 부족을 초래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마술’을 통해 총수요 부족의 위기를 지연시켰다.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제적 환경이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이고 이의 결과가 ‘부채’ 증가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버블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용카드 버블이 담보 없이 차입을 늘려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면, 담보 가치 상승을 통해 소비 촉진을 늘린 것이 바로 부동산과 주식버블이다. 자산버블은 담보가치 상승을 통해 더 많이 차입할 수 있는 여력 증대와 재산 증대에 따른 심리적 효과로 소비수요를 촉발한다.

즉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이란 자산시장의 버블을 통해 자신의 수단을 넘어 돈을 빌리고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의 비율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희생양이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었다. 그 성장 엔진이 꺼짐과

동시에 총수요 부족이라는 근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미국경제는 새로운 축적구조로 전환하기 전까지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제는 1929년, 1973년 구조적 위기 이후 위기 극복과 조정 이후 1940년대와 1980년대에 새로운 축적구조로 전환하였다. 루즈벨트는 노동조합과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레이건은 실업률 확대를 통해 각각의 위기를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떠한 경로를 걸을지 주목할 지점인데, 실업률 상승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산버블 정책과 더불어 전통적인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GDP에서 수출과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로 높은 상태다.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대외개방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외환경의 변화에 그만큼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헤로인에 중독된 환자가 약물의 투약 량과 회수를 늘려 생존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국경제는 자산버블과 대외개방의 규모와 폭을 늘리면서 취약한 경제구조를 점점 더 ‘벼랑끝 경제’로 내몰고 있다.

5. 경제위기의 교훈과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교훈과 과제를 주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 이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진보에도 동일한 질문이다. 자본주의를 크게 ‘시장근본’과 ‘시장규제’라는 두 가지 제도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규제 형태에서 정부는 거시경제와 노동현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과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자본과 노동 간 권력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자본보다 노동의 권력이 우세한 사회를 자본주의라 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엄격히 시장을 규제하면서 자본이 우위인 사회를 신자유주의라 할 수도 없다. 통상 이런 시스템을 파시스트 사회라고 한다. 또한 규제된 자본주의는 고용 증대, 노동계급의 생계 수준, 그리고 사회지출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물론 이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도전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는 노동조합의 위기와 분열을 초래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 또한 실업률 상승과 노동시장 양극화로 노동조합에 결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규제된 자본주의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강화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도전에는 장애로 다가온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급진적 도전에는 우호적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과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지위는 약화시킨다. 이 역사적 역설에 대해서 진보는 실현가능한 사회경제적 대안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가계부채를 통한 유효수요 관리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님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가계의 레버리지 상승과 낮은 저축률은 신규차입 여력과 부채상환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버블은 붕괴되기 때문이다. 버블은 커지면 커질수록 터질 확률만 높아진다. 이는 굳이 고상한 경제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평범한 이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 대비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가격과 부채가 정상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민간소비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초래할 적지 않은 충격에 대비하여야 한다. 자산시장 붕괴에 따른 가계의 재산 감소, 금융기관의 신용축소와 부채상환 요구 증가, 고용악화에 따른 소비축소 등이 동시에 거시경제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주도와 자산버블의 양 날개에서 한쪽을 상실하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더 확대시킬 우려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거시경제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출금리와 가치분소득 증가율이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가계, 금융기관, 정부의 사회적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2.5%까지 높아진 예대금리의 차이를 조정하여 가계의 과도한 부채상환 비용을 줄이고 상환 조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소득 증가가 궁극적 해법임을 인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IMF가 요구한 ‘각서’가 신자유주의 본질임을 뼈저리게 인식한다면, 실패한 거시경제 패러다임 ‘IMF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양극화, 금융투기, 자산버블에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방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는 **실질임금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프로그램 확대**다.

무엇보다 고용과 임금을 증가시켜 견고한 유효수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다시 기업의 국내투자 증가로 이어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생산성과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모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의 필요조건이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노동 관련 제도와 법률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급격한 시장화, 소득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공공의 영역을 개인에게 떠맡겨 발생한 산물들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 거시경제 자동안정화 프로그램, 공정한 시장 규칙과 제도 구축 등 ‘유익한 개입’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확대해야 한다.